18-04 (통권 779호) 2018. 01. 26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중국의 저소비율 탈출을 위한 전략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목 차

■ 중국의 저소비율 탈출을 위한 전략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중국 저소비율 원인과 탈출 전략 ····· 2

3. 종합평가 및 시사점 ····· 8

Executive Summary

□ 중국의 저소비율 탈출을 위한 전략과 시사점

■ 개요

중국의 소비율은 2000년 이전 60% 수준에서 급격히 하락하면서 2005~2015년 사이 평균 50.6%를 기록했다. 특히, 2000년 이후 가계부문의 소비율이 30%대로 추락하면서 총소비율 하락을 주도하였는데, 중국의 가계부문 소비율은 한국, 미국 등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에 비해서도 20%p이상 낮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계부문의 소비율 하락 원인을 분석하고, 중국정부가 소비국가로의 성장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중국 저소비율 원인과 탈출 전략

1) 저소비율의 원인

(국민소득 1차 분배) 중국의 국민소득 1차 분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기업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계부문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중국 가계부문의 소득(임금소득, 개인자산소득 등)이 전체 국민소득 1차배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1999년 평균 68.7%에서 2010~2015년 평균 60.6%로 8.1%p 감소했다. 반면, 동기간 기업부문의 비중은 평균 18.1%에서 24.0%로 상승하는 등 기업의 소득(영업이익) 분배율은 증가했다. 중국의 1인당 자본스톡은 미국의 1/4 수준에 그치는 등 여전히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이어서 높은 투자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부문이 성장하면서 가계로 지급되는 임금소득도 개선 추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나타났다. 가계의 임금소득 중에서도 기업부분으로부터 받는 임금의 비중은 1995~1999년 평균 42.0%에서 꾸준히 개선되어 2010~2015년 평균 50.9%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소득 2차 분배) 가계의 사회보험금 납입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등 국민소득 2차분배는 가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이전되고 있다. 가계부문의 소득세 부담은 큰 변화가 없지만, 사회보험금 부담은 빠르게 가중되고 있다. 가계의 사회보험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GDP 대비 비중이 1995년 1.7%에서 2005년 3.5%, 2015년 5.3%로 빠르게 상승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부부문으로 사회보험금 순유입 등이 크게 증가했다. 기업과 가계로부터 오는 순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의 순경상이전 총액은 1995~1999년 누적 0.5조 위안에서 2010~2015년 누적 12.2조 위안으로 급증, 1999~2015년 사이 연평균 18.7%씩 증가했다.

2) 저소비율 탈출 전략

(임금수준 향상을 위해 기업부문 성장 지원) 중국은 기업부문 성장을 통한 가계소득기반 확대를 위해 기업유치 및 임금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확대 실행하고 있다. 중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그 증가속도는 기존의 20~10%대에서 2017년 5.9%로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1인당 노동생산성도 주변국 수

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 기업유치 확대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에는 외자진입 규제완화, 세제지원 확대, 국가개발구 투자환경 개선, 사업환경 고도화 등 외국인들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로 실행하였다. 더불어, 한국이 전국 단일 최저임금 표준을 실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각 지방정부별 상황에 맞게 지역 내에서 최저임금을 최대 6개 등급으로 세부 분류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정비를 통해 가계부담 완화) 중국은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회보장 부담금 수준을 낮추는 조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에야 비로소 사회보험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본격 시행되었기 때문에 시행기간이 짧아 사회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 동안 높은 세율의 사회보장분담금이 중국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2016년 5월부터 사회보장 제도정비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서비스부문을 육성하여 취업률 제고) 중국은 3차 산업 부문의 성장을 장려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부문 육성을 적극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구조 측면에서 그동안 중국은 자본투자가 높고 임금수준이 비교적 낮은 제조업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저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의 빠른 발전으로 2000년 3차산업 취업자 1.98억 명에서 2016년에는 3.38억 명으로, 16년간 1.4억 명 급증했다. 중국은 서비스 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을 위해 생산성서비스(生産性服務業 ; 금융, R&D, 설계, 법률·세무 등) 중심의 지원과 기업투자 유치 확대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 종합평가 및 시사점

(종합평가) 중국은 소비국가로의 성장을 위해 2020년까지 경제정책 방향이 소비의 경제기여도 증진, 서비스업 비중 확대, 산업고도화 추진, 투자효율성 제고, 新성장동력 육성에 맞춰져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외화유출과 더불어, 對中 외국인 투자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외자유치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국내 산업구조 개편을 가속화화고 궁극적으로 가계소득을 높여야 할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시사점) 중국이 소비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對中 진출 시 '제조기지 활용'에서 '고부가가치 생산기지 활용', '맞춤형 소비시장 진출' 등 Pin-point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이 소비주도 국가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여유인력의 노동시장진입, 사회안전망 구축, 다양한 소득수준 향상 정책 등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외자이용, 투자유치 측면에서는 기술위주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 산업 부흥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진 만큼,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과 3, 4선 중소도시의 소비가 급증하여 중국경제를 이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시화에 따른 소비확대 및 농촌경제의 부상에 적극 대응해야한다.

1. 개요[1)]

○ 중국의 총소비율은 최근 개선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가계부문 소비율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줄곧 개선이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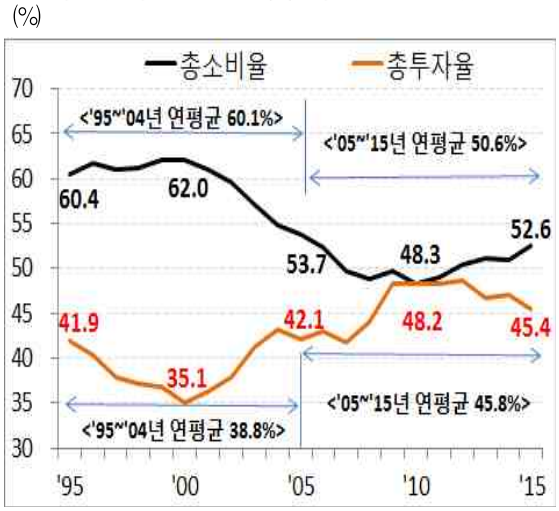
- 2000년부터 중국의 소비율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남
  - 중국의 소비율은 2000년 이전 60% 수준에서 2000년 이후부터는 급격히 하락하면서 2005~2015년 사이 평균 50.6%를 기록
  - 소비율은 최근 다시 회복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다소 정체된 모습임

※ 총소비율(%) = (최종소비(가계소비+정부소비)지출 / 국민총가처분소득) X 100
총투자율(%) = (국내총자본형성 / 국민총가처분소득) X 100

- 총소비율 하락은 주로 가계부문의 소비율 하락에서 기인함
  - 중국의 가계부문 소비율은 한국, 미국 등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낮음
  - 특히, 2000년 이후 중국의 가계부문 소비율이 30%대로 추락하면서 총소비율 하락을 주도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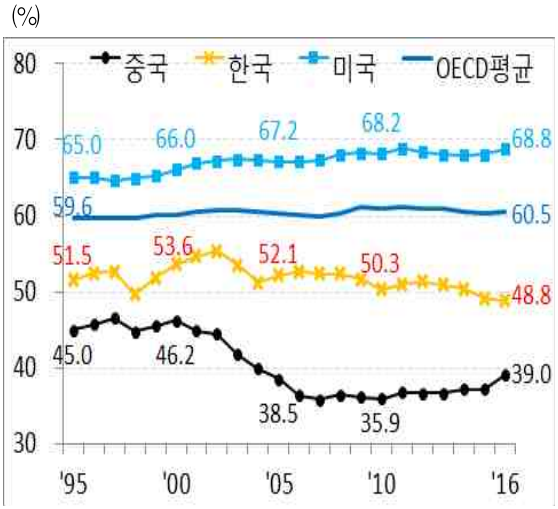
○ 본 보고서에서는 가계부문의 소비율 하락 원인을 분석하고, 중국정부가 소비국가로의 성장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중국 총소비율 및 총투자율 추이 >



자료 : 中國資金流量表 자료로 HRI 재가공.

< 주요국 가계부문 소비율 추이 >



자료 : World Bank.

1) 국민소득추계는 생산접근법, 지출접근법, 소득접근법이 있는데 본 보고서는 중국의 국민소득 분배측면으로 분석하기 위해 중국 자금순환표(资金流量表) 실물거래 부문을 참고함. 중국은 '자금순환표'를 실물과 금융거래 부문으로 나눔.

2. 중국 저소비율 원인과 탈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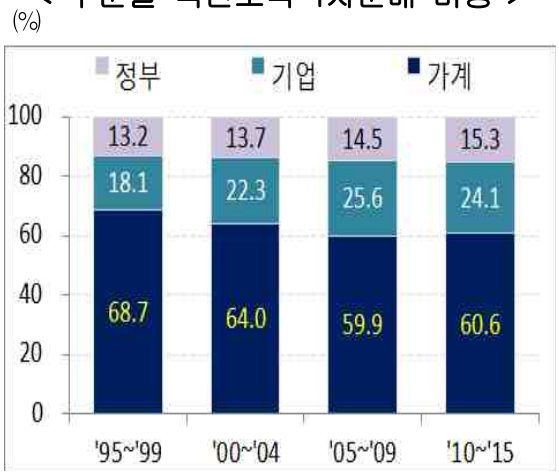
1) 저소비율의 원인

① 국민소득 1차 분배[2] : 중국의 국민소득 1차 분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기업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계 비중은 감소

- **중국의 기업부문의 소득(영업이익 등)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가계부문(임금소득, 개인자산소득 등)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
  - 가계부문의 소득이 전체 국민소득 1차배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1999년 사이 평균 68.7%에서 2010~2015년 평균 60.6%로 8.1%p 감소
  - 반면, 동기간 기업부문의 비중은 평균 18.1%에서 24.0%정도로 상승하는 등 기업의 소득 분배율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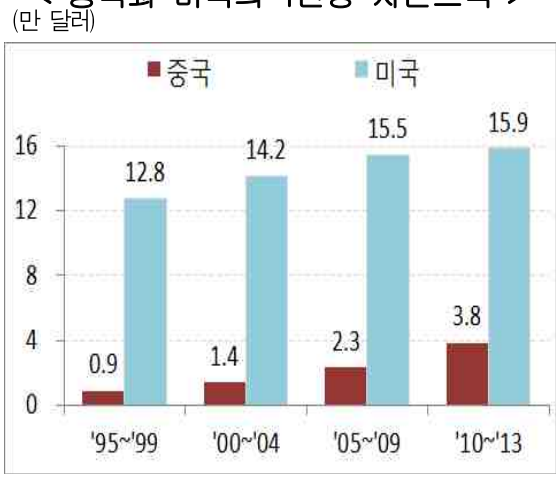
- **중국의 1인당 자본스톡이 미국의 1/4 수준에 그치는 등 투자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크기 때문임**
  - 중국의 1인당 자본스톡은 1995~1999년 사이 평균 0.9만 달러에서 2010~2013년 평균 3.8만 달러로 증가
  - 그러나 동기간의 미국의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높은 투자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부문별 국민소득 1차분배 비중 >



자료 : 中國資金流量表 자료로 HRI 재가공.

< 중국과 미국의 1인당 자본스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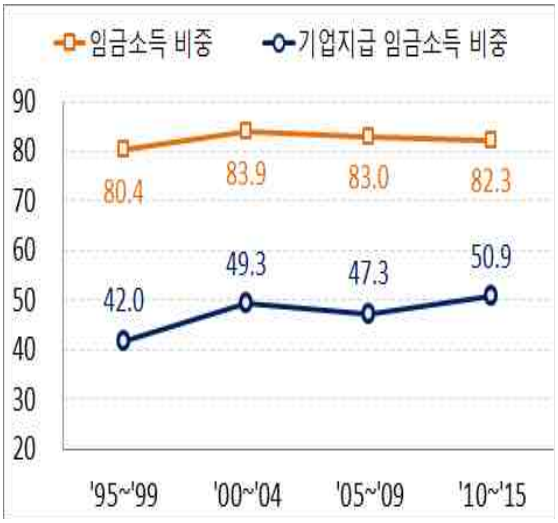


자료 : 國家統計局, World Bank, University of Gro-ningen, 자료로 HRI 재가공.

2) 국민소득 1차분배 : 생산과정에 참여한 가계, 기업, 정부가 임금소득, 자산소득, 생산물세 등 형태로 분배받는 것.

-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부문이 성장하면서 가계로 지급되는 임금소득도 개선 추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나타남
  - 가계부문의 부동산, 금융자산이 증가하면서 가계소득에서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상대적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
  - 특히, 가계의 임금소득 중에서도 기업부분으로부터 받는 임금의 비중은 1995~1999년 평균 42.0%에서 꾸준히 개선되어 2010~2015년 평균 50.9%를 기록
  - 따라서, 가계의 임금소득의 GDP 대비 비중도 최근 다시 상승세를 나타냄

< 가계소득 및 임금소득 비중 >



< 중국의 가계임금소득 추이 >

자료 : 中國資金流量表 자료로 HRI 재가공.
주1) 임금소득 비중 = 가계 임금소득/가계 총소득.
2) 기업지급 임금소득 비중 = 기업지급 임금소득/가계 임금소득.
3) 임금소득 GDP 대비 비중 = 가계 임금소득/명목GDP.

② 국민소득 2차 분배(가처분소득)[3] : 사회보험금 납입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등 국민소득 2차분배는 가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이전

- 가계부문의 소득세 부담은 큰 변화가 없지만, 사회보험금 부담은 빠르게 가중
  - 가계부문 소득세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1995년 0.2%, 2005년 1.1%로 상승한 뒤 최근까지 1.3% 수준을 유지
  - 반면, 가계의 사회보험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사회보험 부담액의 GDP 대비 비중이 1995년 1.7%에서 2005년 3.5%, 2015년 5.3%로 빠르게 상승

3) 국민소득 2차분배 : 가처분소득을 의미. 국민소득 1차분배에서 기업과 가계의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 사회보험순납부, 가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지출, 기타 경상이전 등을 가감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함.

-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부의 사회보험금 순유입 등이 크게 증가

· 기업과 가계로부터 오는 순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의 순경상이전 총액은 1995~1999년 누적 0.5조 위안에서 2010~2015년 누적 12.2조 위안으로 급증, 1999~2015년 사이 연평균 18.7%씩 증가

· 반면, 가계부문의 순경상이전은 정부로부터 오는 보조금, 사회보장금 등이 줄어들면서 1995~1999년 0.9조 위안에서 2005~2009년 0.2조 위안으로 급격히 감소

· 2011년 사회보장 제도가 구축되면서 2010~2015년 누적 1.6조 위안으로 다시 증가하였지만, 1999~2015년 사이 연평균 증가속도는 6.7%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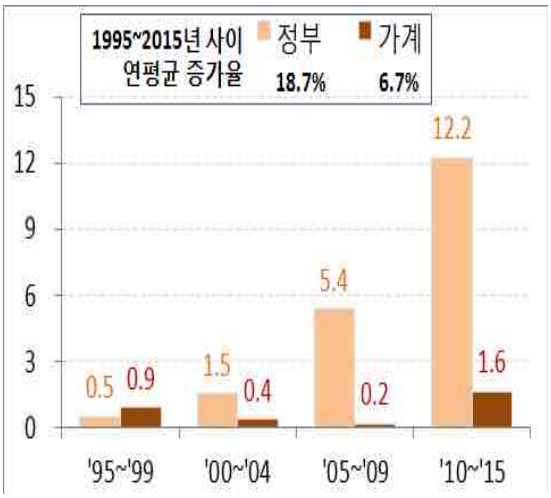
< 가계의 사회보험금 · 소득세 부담률 >

(GDP대비 비중, %)

자료 : 中國資金流量表 자료로 HRI 재가공.

< 가계와 정부부문의 순경상이전 >

(조 위안)



자료 : 中國資金流量表 자료로 HRI 재가공.
주 : 각 기간 별 누적기준임.

2) 저소비율 탈출 전략

① 임금수준 향상을 위해 기업부문 성장 지원

○ 중국은 기업부문 성장을 통한 가계소득 기반 확대를 위해 기업유치 및 임금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확대 실행

- 2010년 이후 중국의 최저 임금 증가 속도가 빠르게 감소

· 중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그 증가속도는 기존의 20~10%대에서 2017년 5.9%로 대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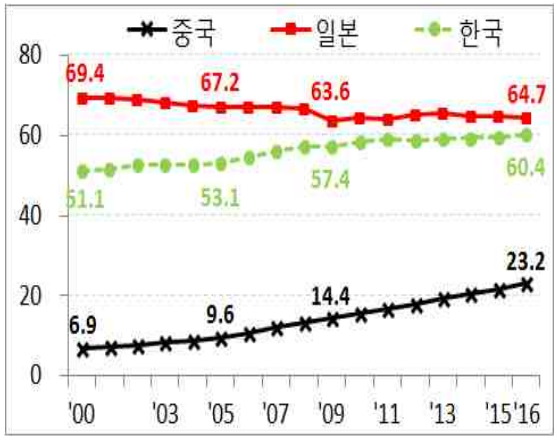
· 임금수준의 향상 속도가 저하되면 가계부문의 소비성향 악화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도 주변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 기업유치 확대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가능성이 커짐**
  - 중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 per person)은 2016년 기준 미국의 23.2% 수준,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그 수준이 많이 차이남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생산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들을 꾸준히 개정하여 실행 중
  - 특히 최근에는 외자진입 규제완화, 세제지원 확대, 국가개발구 투자환경 개선, 사업환경 고도화 등 외국인들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로 실행(關于促進外資增長若干措施的通知, 2017.8)

< 중국 최저임금 수준 및 증가율 >

자료 : 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 국가별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 >



자료 : The Conference Board 자료로 HRI 재가공.

- **또한, 중국은 각 지방정부(省)별 상황에 맞게 지역 내에서 최저임금을 최대 6개 등급으로 세부 분류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있음**
  - 중국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세부등급제 실행, 일본은 도도부현(都道府縣, 한국 광역자치단체 해당) 단위로 최저임금을 별도 적용하며 기업을 유치
  - 한국이 전국 단일 최저임금 표준을 실시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음

< 중국 최저임금 등급제 실행 지역(2017년) >

동부 지역	단일기준	3개 :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3개 등급	4개 : 산둥(山東), 장수(江蘇), 장시(江西), 하이난(海南)
	4개 등급	3개 : 랴오닝(遼宁),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5개 등급 이상	2개 : 푸젠(福建), 광둥(广東)
중부지역	4개 등급	6개 :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허난(河南), 허베이(河北), 산시(山西), 광시(广西)
서부 지역	단일기준	4개 : 쓰촨(四川), 시장(西藏), 충칭(重慶), 칭하이(青海)
	3개 등급	3개 : 윈난(云南), 구이저우(貴州), 닝샤(宁夏)
	4개 등급	5개 : 지린(吉林), 네이멍구(內蒙古), 신장(新疆), 산시(陕西), 간수(甘肅)
	5개 등급	1개 : 헤이룽장(黑龍江)

자료 : 각 지역 人力資源社會保障廳 자료로 HRI 재가공. 주 : 광둥(广東)은 6개 등급 기준을 실행.

② 사회보장제도 정비를 통해 가계부담 완화

○ 중국은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회보장 부담금 수준을 낮추는 조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 **중국은 사회보장제도의 실행기간이 짧아 사회안전망이 취약하여 가계부문이 소비보다는 미래를 대비하는 저축 동기가 여전히 큰 상황**
  - 중국은 2011년에야 비로소 사회보험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본격 시행되었기 때문에 시행기간이 짧아 사회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

-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가계부문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으로 보임**
  - 2016년 이전 중국의 기업부문 사회보장분담금은 명목 월급여액의 최대 34%, 개인의 부담률도 11% 수준에 달하면서 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월급이 비교적 적었음
  - 높은 세율의 사회보장분담금은 중국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바, 2016년 5월부터 사회보장 제도정비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 중국 연금보험 가입자 비중 >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정 전·후 비교 >

분야	주 요 내 용 (월급여 대비 비율)	
	개정 전	개정 후(2016년)
연금보험	▪ 기업부담 20% ▪ 개인부담 8%	▪ 단계적 인하
의료보험	▪ 기업 6~10% ▪ 개인 2%	[두 항목 통합] ▪ 기업 1.25%p 인하 ▪ 개인 2%
보육보험	▪ 기업 0.8%	
실업보험	▪ 기업 2% ▪ 개인 1%	▪ 기업 1.5% ▪ 개인 최대 0.5%
산재보험	▪ 기업 0.5~1.2%	▪ 현행 유지

자료 : 中國財政部, 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③ 서비스부문을 육성하여 취업률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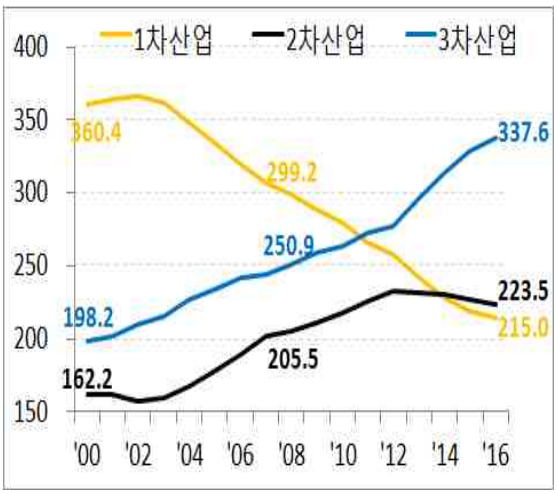
○ 중국은 3차 산업 부문의 성장을 장려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부문 육성을 적극 주도할 가능성이 큼

- **중국경제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2년 이후부터 서비스 부문의 취업자 수도 급증**
  - 산업구조 측면에서 그동안 중국은 자본투자가 높고 임금수준이 비교적 낮은 제조업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저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음
  - 그러나 서비스 산업의 빠른 발전으로 2000년 3차산업 취업자 1.98억 명에서 2016년에는 3.38억 명으로, 16년간 1.4억 명 급증
  - 동기간 2차산업 취업자는 1.62억 명에서 2.24억 명으로 0.6억 명 증가

- **중국은 서비스 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을 위해 생산성서비스(生産性服務業 ; 금융, R&D, 설계, 법률·세무 등) 중심의 지원과 기업투자 유치 확대에 주력할 가능성이 큼**
  - 중국은 12차 5개년(2011~2015년) 규획 당시에도 정책 초점이 금융, 물류, 고기술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등 부분에 집중됨
  - 최근 13차 5개년(2016~2020년) 규획에서도 서비스산업 비중 제고와 더불어, 기존의 서비스부문 개방영역을 추가로 개방하고, 전력, 철도, 에너지 등 공공부분의 서비스도 민간에 개방 추진

< 중국의 산업별 취업자 수 >

(백만 명)



자료 : 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 중국 13·5 규획 서비스부문 주요내용 >

구 분	주 요 내 용
정책 방향	▪ 서비스 산업의 비중 확대 및 질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
추진 목표	▪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 제고** – 2015년 50.5% → 2020년 56% ▪ **기존 개방영역 추가 개방** – 금융, 교육, 의료, 문화, 물류, 연구개발, 비즈니스서비스 등 ▪ **공공섹터 개방** – 전력, 민간항공, 철도, 석유, 천연가스, 우정사업 등

자료 : 國務院.

3.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종합평가) 중국은 소비국가로의 성장을 위해 2020년까지(13차 5개년 규획 기간) 경제정책 방향이 소비의 경제기여도 증진, 서비스업 비중 확대, 산업고도화 추진, 투자효율성 제고, 新성장동력 육성에 맞춰져 있음

- **중국은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4] 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지난 2015년 시진핑 주석은 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20년) 동안 빈곤지역과 빈곤인구들을 샤오캉(小康) 사회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
  -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도록 2020년의 국민소득(1인당 GDP)을 2010년 대비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7000여만 명의 빈곤인구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중국의 전국평균보다 높게 만들어야 하며 공공서비스 지표들도 전국평균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

- **한편으로는 최근 대규모 외화유출과 더불어, 對中 외국인 투자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외자유치 수요가 급증한 상황**
  - 중국은 2015년부터 불투명한 중국경제 전망 및 위안화 약세 전망 등으로 외화유출이 급격하게 이루어짐
  - 또한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유치 측면에서도 신뢰도가 하락했으며, 자본유출에 대한 당국의 통제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쳤음

-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국내 산업구조 개편을 가속화화고 궁극적으로 가계소득을 높여야 할 필요성도 커졌음**
  - 2017년 들어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생산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와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 부문에 대한 개방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4) 샤오캉(小康) 사회란, 모든 인민이 먹고사는 데 걱정이 없고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혜택도 누리는 사회를 말함.

< 2017년 중국의 주요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

정책	발표 시기	주 요 내 용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조치 (擴大對外開放積极利用外資若干措施的通知)	1월	▪ 첨단, 스마트, 친환경 제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 확대 ▪ 외자기업의 R&D 센터 설립 장려,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 ▪ 외자기업의 융자 및 상장 지원 등
자유무역시범구역 추가 방안 (中國自由貿易試驗區總体方案)	4월	▪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기존의 4개(상하이, 텐진, 광둥, 푸젠)에서 2017년 4월부로 7개(랴오닝, 저장, 후난, 쓰촨 등) 추가 ·※ 현재 총 11개
내륙과 홍콩 채권시장 교차거래에 대한 점정 방안 (內地与香港債券市場互聯互通合作管理暫行辦法)	6월	▪ **(채권통)** 홍콩과 중국본토의 은행간 채권시장(CIBM, China Interbank Bond Market)의 교차거래 허용 ※ 홍콩→본토 단일방향 투자만 일단 허용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 7차 개정안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7월	▪ 규정 발표 20여 년 만에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 외국인투자규제 93개에서 63개로 축소 ▪ 하이테크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등
외자성장 촉진을 위한 조치 (關于促進外資增長若干措施的通知)	8월	▪ 외자진입 규제 완화, 세제지원 확대, 사업환경 고도화 추진 등 ▪ 은행·보험, 해운·철도운수, 전기자동차 제조 등 12개 업종의 지분제한 삭제 혹은 완화 등
외국인투자자의 재투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일시면제에 대한 통지 (關于境外投資者以分配利潤直接投資暫不征收預提所得稅政策問題的通知)	12월	▪ 외자기업이 이익금을 재투자할 경우, 배당세 원천징수를 일시 면제 ※ 현재 중국은 외자기업에 대해 주식배당과 현금배당 등 투자수익의 10%를 세금으로 원천징수

자료 : 中國國務院, 中國人民銀行.

○ (시사점) 중국이 소비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對中 진출 시 '제조기지 활용'에서 '고부가가치 생산기지 활용', '맞춤형 소비시장 진출' 등 Pin-point[5]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첫째, 중국이 소비주도 국가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여유인력의 노동시장진입, 사회안전망 구축, 다양한 소득수준 향상 정책 등을 내놓을 가능성이 큼

· 중국은 생산→분배→소비의 순환구조 향상을 위해 가계저축의 자본으로의 전환,

5) 핀포인트(Pin-point 전략)이란 맞춤형 선택적 집중공략 전략을 의미함.

농민공(農民工)들의 노동시장 진입, 과잉생산설비 퇴출 및 생산기술 업그레이드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를 통해 국민들의 소비성향을 증대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농촌인구의 도시정착 지원, 근로자 교육서비스 확대, 해외소비의 국내 환류(U턴), 가계금융서비스 등과 같은 제반 정책의 다변화가 예상됨
- 또한, 늘어나는 소비수요와 고도화 돼가고 있는 소비구조를 충족시킬 만한 자체적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외자를 적극 유치할 가능성이 큼

- 둘째, 외자이용, 투자유치 측면에서는 기술 중심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 업 부흥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진 만큼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함

- 중국은 소비 증가율과 더불어 총저축의 증가율도 둔화세를 보이면서 총투자 가능금액도 줄어드는 상황
- 따라서 기업들로 하여금 고부가가치 제조업, 첨단 융합산업, 서비스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여 기업부문의 생산성 확대를 통한 가계소득 향상을 유도하려고 함
- 특히, 외자유치 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서비스 부문의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조세부담을 완화(증치세 개혁), 외자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해야 함
- 또, 친환경 제조업(전기자동차, 신에너지發電 등), 연구개발, 보험서비스 등은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분야여서 외국기업들의 진출 확대 예상

- 셋째, 농촌지역과 3, 4선 중소도시의 소비가 급증하여 중국경제를 이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시화에 따른 소비확대 및 농촌경제의 부상에 적극 대응해야 함

-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3, 4선 중소형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서비스,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1, 2선 대도시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요양, 보건·위생 등 분야로의 진출도 모색해야 하며,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소비재, 여가활동서비스 등으로의 진출도 검토 필요
- 농촌의 현지 상황에 알맞은 농기구, 가전제품, 설비부품, 농촌지역 온·오프라인 유통서비스, 농촌금융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구상할 필요성이 있음

천 용 찬 선임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